



제2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곡 통합어린이집 건립 취소】**

## **검 토 보 고 서**

2023. 6. 13.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서 용 관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 1. 제안경과

- 제안연월일 : 2023. 6. 2.
-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 2. 제안이유

- 금곡 통합어린이집 건립 계획이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지구내 영유아복지문화센터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금곡 통합어린이집 건립 취소 ----- 보육정책과

## 3. 검토의견

- 금곡 통합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2020년 10월 제274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으로 승인된 사업이었으나 지난해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본 계획을 변경하여 통합 어린이집을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지구내에 건립 예정인 영유아 복지문화센터내로 설치하기로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2019년 하나금융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추진되었으며 당초 하나금융 11억 6천만원, 국도비 16억4천만원, 시비 19억 6천만원 총 47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었으며 추진 방식은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건립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 되었음,

-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설유형이 장애통합에서 장애전문 어린이 집으로 변경된 바 있으며 '21. 11월 계약된 설계용역은 '22. 5. 16일 과업이 중지된 상태임
- 확인 결과 사업부서에서는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영유아복지문화센터 내로 이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관내에 소재한 사유지 등을 활용하여 1년 이내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음에 따라 당초 목적은 최소한으로 달성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장기간 검토 진행된 사업이 변경되는 만큼 주민 의견, 예산에 관한 사항 등 사실관계 확인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4.20]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⑦ 생략